



이달의 초점

## 정부와 언론의 대북 태도

이경일

문화일보 논설위원

북한과 미국의 제네바 핵합의에 따라 베를린에서 단속적(斷續的)으로 열려 왔던 경수로 전문가회담이 목표시한인 4월 21일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경수로회담 타결을 계기로 남북한 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 국민에게 일단 실망을 안겨준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베를린회담은 미국과 북한이 경수로 노형 선정을 놓고 기본적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된 것이다. 북한은 처음부터 한국형 경수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경수로 건설과정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 수행도 인정하지 않는 등 현실과 거리가 먼 주장으로 일관했다.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그들의 남한배제전략에 따른 경직성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은 북한측이 한국형 경수로 채택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 인정이라는 기본원칙 범주내에만 들어올 경우 다른 부문에서 북한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 포용할 의지를 갖고 있었다. 미국은 현재 준비중에 있는 북미연락사무소 개설을 서두르고, 한국으로서 는 경수로에 한국형이라는 명칭이 명기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국형이 제공되는 선에서 이를 수용하는 한편 북한의 가중되는 경제난 해소를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이 실질적으로 경수로 공급을 주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조건에만 집착하는 바람에 베를린회담은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북한대표단이 처음 한국형 경

수로가 「실재하지 않는 유령」이라고 몰아세우다가 후에 태도를 바꾸어 경수로의 안정성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나름대로 평가해 줄 수도 있는 대목이다.

베를린회담이 끝나면서 미국은 즉각 북미 고위급회담의 개최를 제의했다. 고위급회담을 통해 정치적 절충을 계속하자는 것이다. 이 제의에 대해 북한당국은 「검토중」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당면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평양당국은 미국의 제의를 결국 수락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은 경수로회담이 결별될 경우 현재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영변의 5MW 원자로에 연료봉을 재장전하는 한편 건설을 중단한 「방사화학실험공장」도 재건설할 것이라고 위협해 왔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공통된 관측이다.

북한당국이 이같은 초강수를 쓰게 될 경우 그들이 입을 타격이 너무도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북한은 경수로는 물론 미국과의 연락사무소 개설, 무역제재 완화, 직통전화 개설, 증유 등을 잃게 될 것이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다. 평양당국은 나아가서 일본과의 수교교섭과 남북경협까지도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비현실적인 초강정책은 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결국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을 통해 경수로협상을 계속하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시도할 공산이 크다. 정부는 북한의 이런 시도를 주시하면서 앞으로 대북한 관계를 관대하면서도 장기적 안목에서 밀고 나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나웅배 부총리가 최근 밝힌 대북한 자세는 전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부총리는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에 응한다면 경수로 제공사업에서 북한측 요구를 상당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천명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까지 남북문제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유연한 대응을 피다가 강경자세로 후퇴하는가 하면 너무도 군사·정치적 측면에만 몰두해 왔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또한 북한에 대해 경제협력을 제의하면서도 「가급적 소리나지 않게」 하는 슬기로우음을 보이지 못했다. 경제난에 처한 북한으로서도 그들의 나름의 체면이 손상되면서 남한측의 경협을 받을 수는 없다. 그것은 평양당국의 정권안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울러 남북문제에 있어서 중선의

정치·경제 및 군사적 접근 이외에도 접근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까지 비교적 등한시해 왔던 종교, 학술, 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의 대북한 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최근 불교계 인사 2명의 방북을 승인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면 그것은 현재 얼어붙어있는 남북관계 해빙에 도움을 줄 것이 확실하다.

우리는 그 동안 남북관계의 작은 현상들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언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언론이 대북한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기본적 자세는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리적이면서도 신뢰를 높이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반도에는 아직도 한국전쟁으로 야기된 긴장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의 제네바합의에 따라 긴장상태는 상당히 해소되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긴장완화만으로는 부족하다.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정착이 우선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양국은 물론 언론

이 우리민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수적이다. 분단에 따른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대결자세가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 민족구성원 전체의 발전과 복지를 추구하는 통일의 길로 나가겠다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여기에는 언론의 정확한 인식과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언론이 그동안 보여온 일련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할 소지가 크다.

작년 3월 북한대표 박영수는 판문점 실무 회담을 통해 「서울 불바다」 운운을 외쳤다. 그 때 우리 언론은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똑같이 흥분해서 북한규탄에 앞장섰다. 북한당국은 힘이나 논리에 밀리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위협하는 것이 거의 상투적 수단이었다.

우리는 그 좋은 예를 한국전 휴전회담과 그에 이은 판문점 정전위 회의에서 수없이 보아왔다. 더구나 상대방을 무력으로 공격하는 측이 이를 먼저 발설하는 일은 거의 없는 법이다. 우리는 6·25사변 당시 북한측이 공격에 앞서 대남한 화해공세를 펼쳤던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은 감정에 치우쳐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현실적 위협에 똑같이 날뛰는 추태」를 보였던 것이다.

언론의 이같은 자세는 작년 6월의 카터 전 미국대통령 방북을 전후해서 또 다시 나타났다. 이 땅의 대다수 언론들은 카터의 방북이 미국과 유엔의 대북한 제재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들 언론은 카터 방북이 「북한에 이용당하기 쉽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평양방문이 한국과 미국의 대북한 제재 공조 움직임에 「방해불이 될 것이라고 공격했다. 카터 방북이라는 「절호의 카드」를 활용하는 문제는 아예 외면했다. 언론은 북한에 대한 감정적 적개심에 바탕을 둔 맹목적 흥분만을 일삼았던 것이다.

언론은 작년 8월 제네바합의가 도출되기 직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일부 언론은 국민들이 「안보불감증」과 「태평무드」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은 수십년 동안 전시체제하에서 가난과 굶주림에 익숙해 있으며, 잃을 것이 우리에게 비해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이런 주장은 마치 북한이 당장에라도 남한에 대해 무력도발할 것 같다는 논지였다.

그러나 언론의 이같은 논지는 북한의 현실을 착과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굶주리고 있는 것은 김정일 일파가 아니라 북한주민이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만약 북한이 남한을 무력침공하려 한다면 그 결정권은 김정일 일파가 쥐고 있는 것이지 북한주민들이 아니라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엄연한 현실을 우리의 일부 언론은 무시했던 것이다.

언론이 너무도 자명한 사실을 비현실적 논리로 호도하려 했던 것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전쟁위기감을 조장해 왔던 타성과 권위적의적 정권하에서 익숙해 왔던 관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의 이같은 타성과 관성은 오늘날에도 크게 시정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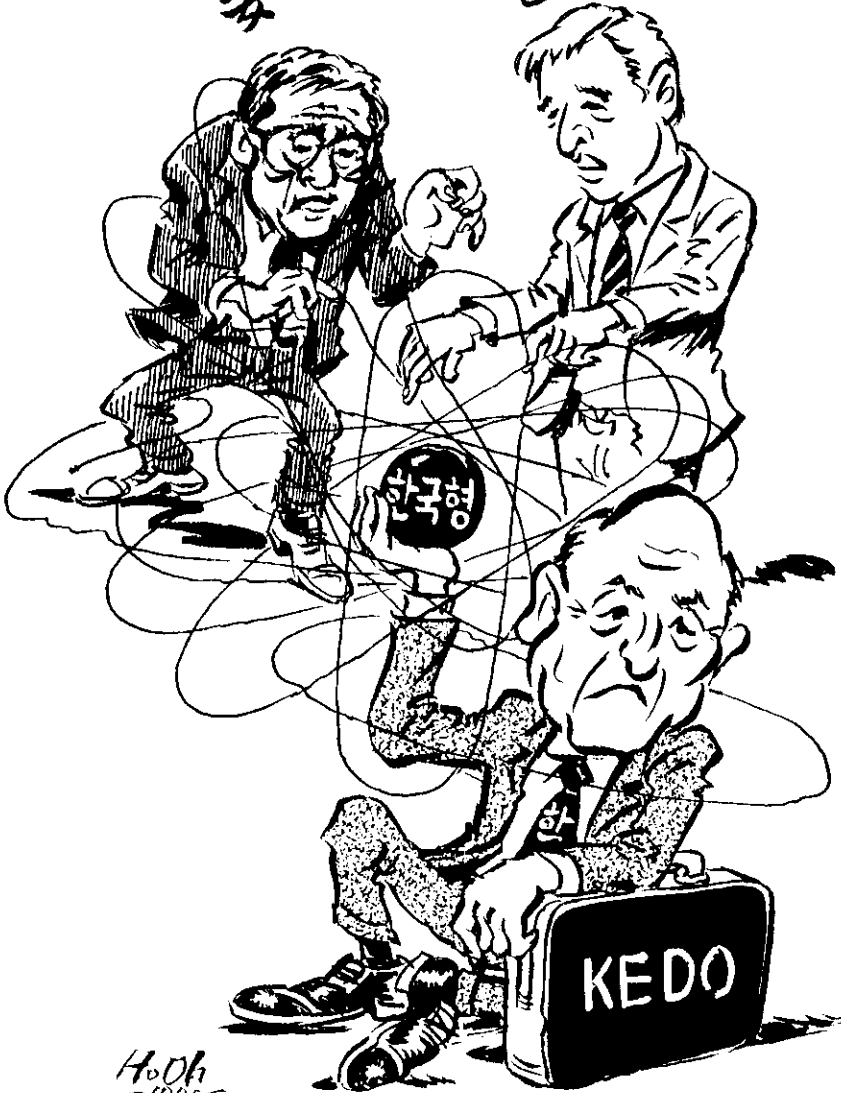
남한국민은 물론 북한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어떤 주장도 그것은 「한겨레」의 이름으로 억제되어야 한다. 더구나 일부언론이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쟁위기설을 고취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 땅의 언론은 외국 언론의 무책임한 「전쟁 시나리오」까지도 냉철하게 비판하고 배척하는 슬기로움을 가져야 할 것이다.

# 〈漫評〉

姜

갈루치



『동양경제』 1995년 5월호